

국정 안정론 vs 정권 심판론...물러설 수 없는 한판승부

21대 총선 전망과 관전포인트

제21대 총선의 본격적인 카운트 다운이 시작됐다.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무대'이자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결정하고 오는 2022년 대선 전초전 성격을 갖는 만큼 여야의 사활을 건 한 판 대결이 예상된다.

◇과반의석 확보 최대 과제=21대 총선의 시계(視界)는 불투명하다. 일단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입법부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에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야권은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권 심판론'으로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의 '국정 안정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정면 격돌하게 되는 셈이다.

여권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 20대 국회에서 정점 법안을 놓고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한계를 절감한 만큼 여당은 원내 1당 유지를 넘어 과반 의석 확보가 최대 과제다.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은 탄핵 사태 이후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펼쳐야 한다. 특히,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패배의 고리를 끊고 재도약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거대 양당 구도 속에서 제3의 대안정당 위치를 유지하느냐가 관전포인트다. 정의당은 두 자릿 수 의석 확보로 소위 진보 정당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소수 정당의 위치에 머무를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의 국회 의석 분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8석이다. 야권은 한국당 114석, 바른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무소속을 제외한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이른바 범진보 정당(149석)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

여대야소나 여소야대나

향후 정국 가를 분수령

선거제 개편·정계개편 변수

대권 잠룡 성적표 따라 부침

승패 가를 호남민심 흐름 주목

여국당 등 범보수 정당(144석)의 팽팽한 힘의 균형이 깨질지도 관심이다.

◇선거제 개편·한반도 정세 변수=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전반에 내재된 각종 변수는 전체적인 판을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 여부는 총선 구도를 좌지우지할 대형 변수다.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결실을 보면 정계개편 없이 현재의 다당제 구도 속에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군소정당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도 있다. 시간도 충분치 않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 여야 4당의 공조가 유지될 것인지도 미지수다.

선거제 개혁이 불발되면 야당발(發) 정계개편론이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이 구상 중인 '보수 대통합론',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의 연대 또는 결합인 '제3지대론' 등 다양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한반도 정세도 총선 승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요인이다. '포스트 하노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더해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총선 구도가 출렁일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성과가 나오면 여당에 유리한 선거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반면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민심 전반에 피로감이 쌓이면서 안보 문제를 고리로 하는 야당의 역공 소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민생 경제 문제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연말·연초까지 일자리 등 민생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잠룡들 행보·세대 교체 주목=잠룡들의 총선 행보도 주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총선 출마와 중앙선대본부장 등 총선 총괄을 맡을 가능성이 엿갈린다. 출마가 확정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결과,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의원의 대구 지역구(수성 갑) 수성 여부도 이들의 대선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총선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총선 성적표가 관심사다. 황 대표가 총선 승리를 이끌면 보수진영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이 크게 올라갈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엔 총선 패배 책임론에 휘말려 정치적인 내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안철수 전 의원 등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총선 때마다 되풀이된 현역 의원 물갈이와 세대교체, 지역구도 혁파 등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특히 부산·경남(PK)에선 동진(東進) 정책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민주당과 보수 결집을 통한 수성에 나선 한국당이 치열한 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 민심의 흐름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현재 호남지역 지지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의 지지를 추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호남 민심의 쏠림 현상이 크다는 점에서 한번 무



“한국당 국회 정상화 옹호하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너지면 견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선 잡음 등 민주당이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호남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호남에서 무너진다면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중심 축이자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자주 호남을 찾아 당정협의 등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같은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해 결과에 따라 정국의 흐름은 물론 차기 대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여기에 각종 정치적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총선 구도는 막판까지 유동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평화당과 제3지대론·한국당과 보수 대통합

바른미래당發 정계개편 바람 분다

야권발(發) 정계개편론은 내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국의 지각변동을 촉발할 핵심 변수다. 옛 국민의당에 뿌리를 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연대 또는 통합하는 '제3지대론'이 대표적인 시나리오다. 두 당 모두 변화를 통해 정치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생존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와 여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한국당이 연일 '우클릭'을 하는 상황에서 제3지대 정당을 구축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탈 표를 흡수하는 한편 중도표를 결집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 내용이 야권발 정계개편의 불씨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원내 제3당의 바른미래당은 창당 이후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가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고, 특히 지난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선 참패 이후 내용이 극심한 상황이다. 손학규 대표의 진퇴 논란 속에서 두 세력이 또 한 번 격돌, 결국당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애초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두 세력은 이념과 정책 노선이 다르고 선거제도에 따른 이해관계가 갈려 총선을 앞두고 헤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이야기가 적지 않았다. 또 개혁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계와 합리적

중도를 표방하는 국민의당계가 염두에 두고 있는 통합 대상이 각각 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또는 평화당으로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가기 힘들 것이라 시각이 많았다. 여기에 외부적 환경도 제3지대 정계개편론에 힘을 실고 있다. 4·3 보궐선거에서 자신감을 회복한 자유한국당이 야권표 분열을 막기 위해 '보수 대통합'의 균형을 지피고 있다.

평화당에서도 손 대표를 향해 제3지대 통합을 결단하라고 압박하면서 바른미래당 정계개편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정의당과 다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불발된 것도 바른미래당과 제3지대에서의 통합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제3지대론을 토대로 하는 정계개편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내부 세력 간의 당을 차지하기 위한 힘겨움이 길어질 수 있다. 여기에 차기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특히, 국민의당의 분열과 몰락을 경험했던 민심이 다시 제3정당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는 미지수다. 결국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창조적 파괴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3지대론이 민심을 파고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반대 속 발 빼는 바른미래...선거제 개편 물 건너 가나

준연동형 비례대표 단일안

한달 지나도록 진전 없어

내년 4·15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 전망은 불투명하다. 여야는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무색하게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지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달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

서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일안을 도출했지만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로 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있어 기소권을 놓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18일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야 4당이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선거제에는 지역구를 28석이나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는 점도 걸림돌이다. 과거 총선때 지역구 2~3석을 줄이는 것도 해당 지역의 엄청난 저항을 받았다. 이번엔 28석이나 줄인다면 엄청난 소동이 벌어질 수 있다. 호남도 지역구가 많게는 3~4석이 줄 수 있다.

패스트 트랙을 통해 선거제 개편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시간도 많지 않다. 차기 총선이 내년 4월 1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2월까지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최대 소요 시간이 330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에는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

정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대난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온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 시도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한 끝내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반적인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여기에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고 시간도 많지 않아 선거제 개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매·임대차·매입비축·임대수탁
 - 매매,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 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 받아 임대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중도인출 가능)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독특한 농지관리 전문가 농지은행 |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농지연금 | 문의 전화 1577-7770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매·임대차·매입비축·임대수탁
 - 매매,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 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 받아 임대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중도인출 가능)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독특한 농지관리 전문가 농지은행 |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농지연금 | 문의 전화 1577-7770